

통상

김연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머리말

脫냉전시대의 도래와 함께 세계는 '체제블럭' 간의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일국 단위의 경쟁체제를 재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되어 온 세계 경제의 통합화가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근대국가체제에서 나타났던 군사적 경쟁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고 각국의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시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경제적 동맹이라 할 수 있는 EU, NAFTA, ASEAN 등의 지역주의도 이러한 경쟁 구조 속에서 각국이 나름대로 선택한 생존 전략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빚어낼지 모르는 혼란과 폐해를 방지하고 세계 경제의 다자간 경쟁체제를 제도적으로 묶어내기 위해, 세계는 다자간통상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GATT체제를 대신하여 출범한

WTO체제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회원국들간의 양자간 협상이 WTO체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통상 현안은 양자간, 다자간, 지역주의 등 다층적인 관계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상 현안의 내용도 무역 수지나 구조 마찰 등 거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제도·법규·관행 등 미시적인 부분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1997년의 경우도 다층적인 차원에서 여러 미시적인 부분의 통상 마찰이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우리 정부가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WTO에 제소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통상 마찰 문제를 다자간 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전략 변화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있어서 수세일변도였던 통상 정

책을 적극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상 마찰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전략으로 WTO 제소가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다. 이는 향후 통상 마찰의 새로운 해법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과제를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1997년 한 해 동안 제기되었던 통상 현안들을 양자간·다자간지역주의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대응 방안과 아울러 IMF 구제 금융 이후 통상 문제가 있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자간통상규범시대의 전개

전후 세계는 세계 경제의 다자간경쟁체제를 제도적으로 묶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GATT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에 출범한 WTO체제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WTO 가입이 실현될 경우 舊사

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편입이 완료됨으로써, WTO체제는 명실공히 쏠지구적인 경제 기구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WTO체제의 출범은 한마디로 규범에 기초한(rule-based) 세계무역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GATT시대에 상품 무역에 국한되었던 다자간 무역 규범은 WTO체제 하에서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교역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17개 다자간무역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또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무역과 관련된 투자, 경쟁 정책, 노동, 환경 등 이른바 신통상 의제들(New Trade Issues)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모든 경제 분야가 다자간 규범의 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WTO체제의 본질과 향후 전개 방향을 직시해서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WTO 규범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의 경제 이익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WTO체제의 출범 이래로 그동안 우리는 국내제도의 조정 문제에 전념해왔

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자간 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한편,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국에게 다자간 규범의 이행을 촉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통상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정부내 관련 부처간 그리고 民官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선진국 수준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관행을 갖추어가는 노력을 기울여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U와의 미시적 통상 마찰 증가/ASEAN과의 무역 적자 현안

지역주의는 UR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그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던 1990년 이후 가속화되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통상 장벽이 되어왔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해외 투자 확대 전략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이들과의 이해·협력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

러나 우리의 3·4위 교역 상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EU 및 ASEAN과의 통상 마찰 소지가 최근 들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먼저 EU의 경우 1991년 이후 무역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1996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의 공여마저 중단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농산물, 주세, 정보통신 등의 부문에서 EU의 통상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U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자동차·전자 등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부문에서의 무역 불균형 시정, 한미간 협상 내용의 무차별 확대 적용, 농산물 분야의 통관 절차상의 규제 완화 등이다. 이와 함께 EU는 주세제도에 있어 일본과 유사한 한국에게 WTO 제소 결과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0년대 들어와 우리의 무역 흑자 상대국이었던 ASEAN의 경우, 금년 들어 수출 둔화와 금융 위기로 인해 우리와의 교역 규모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 증가율마저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ASEAN 주요국들은 對韓 무역 적자 확대 문제를 가장 중요한 통상 현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도 상당히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현재 WTO에서는 지역주의가 다자간무역체제에 잠재적 위협 요인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그동안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으로서 상당한 차별을 받아온 우리의 입장에서는 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무역협정 과정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인 제안들을 제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WTO 제소 결과의 확대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대응 논리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ASEM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관계의 강화를 모색하고, EU에 대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알리고 협력 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며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ASEAN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한 성의를 보임으로써 통상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한미 통상 마찰의 새로운 전개

전통적으로 한미 통상 마찰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였다. 이때문에 한국은 국내 시장 개방 압력과 한국 제품의 미국내 수입 제한 조치 등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對美 무역 적자가 급증(1996년 116억 달러, 1997년 100억 달러 초과 예상)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통상 압력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수출 증대가 고용 확대 및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미국의 최근 통상 정책 기조가 공세적 통상 정책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품목·사안별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對美 수출품에 대한 각종 수입 제한 조치들도 보호주

의 정책 수단을 넘어, 보복 조치의 기능을 통해 통상 압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금년 들어서는 통관, 검역, 기술 표준, 유통 과정 등 절차·기술적 문제가 소위 '2차적 시장 장벽'으로서 美업계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통신·자동차 등 양국의 산업 정책상 이해 관계가 크게 대립되는 분야에서 시장 개방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래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양자 협상과 각종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개방화 및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조적 통상 마찰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양국간의 교역이 다양화되고 폭이 크게 증대하면서 제도적인 차이에서 오는 마찰의 소지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전망이다. 금년 들어 우리 정부는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WTO에 제소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통상 마찰 문제를 다자간 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전략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對美 통상 문제를 WTO에 상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로

볼 때, 이는 그동안 미국에 관한 한 수세일변도였던 통상 정책을 적극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상 마찰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전략으로 양자 협상외에 WTO 제소가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다. 최근에 자동차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이 슈퍼301조를 발동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WTO 제소 의지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전략 변화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다자간 통상 기구의 활용을 통한 대미 협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반길 만한 일이다. 단, 다자간 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는 제소에서 최종 판정의 이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이 얽혀 있어 자칫 제소의 실익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통상 마찰이 있기 전부터 미리 美 의회와 업계를 포함한 미국의 통상 관련 여론 형성층과 접촉을 강화하여, 우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의 경제 현실과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노력도 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도 각종 규제를 완화

하고 비효율적인 통상 관련 각종 법규, 제도, 관행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대미 통상 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

최근 우리 정부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함에 따라 당장 1998년부터 IMF의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구조 조정과 대외 개방이 강도 높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EU 등 협조 용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이 그동안 한국과의 통상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불만 사항들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의 공통 관심 사항인 자동차 세제와 주세 문제를 비롯해 대외 무역 상의 장애 요인과 반경쟁적 관행, 투자 장벽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농수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수입면허제도를 통한 수량 제한 완화, 과일류 및 채소류에 대한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정부 조달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통상 압력을 가해올 것이다. EU 역시 주세 인하, 자동차 시장 수입 개방, 통신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해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상 압력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는 이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비효율적인 통상 관련 각종 법규, 제도, 관행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과감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의 요구에 대해 대등한 자세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다자간 기구를 통해 그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의 입장을 동조하는 그룹을 형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서민**